

# 국보협 “혁신위, 숫자놀음 아닌 실력있는 보좌진 육성 우선”

인요한, 국회 보좌진 감축안 논의  
별정직 공무원·인턴으로 9명 채용  
한 해 인건비로만 1500억 이상 추계  
인턴 등 체계적 교육시스템 없어  
전문성보다 인적 네트워크로 채용  
2년마다 교체... 전공 살리기 어려워

‘입법과 지역구 관리 업무에 전문성 있는 인재의 채용’이라는 의회 선진국의 선례에 따라,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 1일 비대면 회의에서 국회 보좌진의 연봉과 숫자를 줄이는 것을 ‘2호 혁신안’의 내용으로 검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다음 날(2일)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국보협은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국회 보좌진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좌진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혁신위는 가히 토사구팽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위에서 이후 추가로 구체적인 국회 보좌진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않아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현행 국회의원 보좌관 제도가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

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 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급의 경력직 채용은 평관조이나 전문 자격증 인증을 통해 능력을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나, 인턴이나 비서관의 교육 및 양성은 의원실에서 보좌관이나 선임비서관이 맡는 ‘도제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만, 회기를 거듭할 수록 국회의원의

1명당 보좌직원의 수와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찌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 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국회 보좌진의 채용은 공고를 내고 이력서 검토, 평판 조회,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국회의원의 독자적 결단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전문성보다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여지가 높다. 의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정성 평가를 통해 지원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기도 어렵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채용하더라도 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가 2년에 한 번씩 바뀔 가능성이 높으니 전공과 전문성을 살리기 쉽지 않다.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보고서인 ‘국회의원 보좌관 전문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미국은 의회 선진국 중에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을 가장 많이 두고 있다. 하원의원 1인당 최대 18명의 상근 보좌진을 둘 수 있다. 보좌진을 공무원

으로 채용하고 입법과 정무가 뒤섞여 일하는 경우가 많은 우리와 달리 미국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사적 계약을 통해 재량껏 채용하고 입법, 공보, 민원, 지역구 관리 등 업무를 세분화하고 정형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도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진을 7~8명 고용하고 있으나,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보좌진은 3명이다. 이 중 정책비서의 경우 10년 이상의 국회 경력이 요구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 전문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보협은 입장문에서도 “혁신위가 진정한 정치 개혁 방안을 고민한다면,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숫자놀음이나 할 것이 아니라 실력 있는 보좌진을 키워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맞다”며 전문성 있는 입법 보좌진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보협 관계자는 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좌진이라는 것이 여러 업무에 대한 교육이 아직까지 미흡하다. 경험이 많은 보좌관분들이 새로 들어오는 보좌진을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인요한, “친윤 희생” 요구에 지도부 ‘침묵’

“친윤 의원에 결단 내려달라 전화”  
초선인 이용 의원 불출마 선언  
‘통합’에 이어 성공 어려워 보여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계(친윤석열계)와 당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에게 불출마 혹은 협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이들이 혁신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혁신위의 1호 안건인 ‘통합’(징계 취소)은 당사자들의 반발이 심해 큰 반향을 주지 못한 만큼, 2호 안건인 ‘희생’에 적극적인 화답이 있어야 혁신위도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한 MBN과의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을 지지하고 사랑하면 희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이 지목한 ‘친윤’ 지도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대략 30여명 선이다. 친윤계로는 권성동(4선, 강원 강릉)·장제원(3선, 부산 사상)·윤한홍(재선, 경남 창원 마산회원)·이철규(재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박성민(초선, 울산 중구) 등 5명이 거론된다.

당 지도부로는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 4명이 언급된다. 영남권의 3선 이상 중진의 경우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역을 합쳐 16명 선이다. 비(非) 영남권은 10여명 정도 된다. 국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부산 남구 경성대에서 열린 ‘이연주&이준석 특!특! 콘서트’에 참석, 토크콘서트를 지켜보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지만 끝내 불발됐다. /뉴시스

의힘 소속 현역 의원(111명)의 30% 가량이 희생을 요구받은 셈이다.

하지만 모두 인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인 위원장은 이날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분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전화했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재차 압박을 한 셈이다.

진행자가 ‘결단의 대상으로는 권성동·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대표가 떠오른다’고 말하자 “그 중에 한두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의 ‘희생’ 혁신안은 총선을 앞두고 대대적 물갈이를 통한 혁신의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당이 위기인 만큼 스스로 나서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서는 ‘인적 쇄신’이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에 따라 여야의 성적표가 갈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초선인 이용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인 위원장의 브리핑 직후 “당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하면 불출마 할 것이고 협지 출마를 하라고 하면 이 역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아 친윤계로 분류됐다.

이제 여론의 관심은 이 의원에 이어 누가 나설지에 쏠린다. 일단 인 위원장의 ‘권고’에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때문에 여론 내에서는 혁신위에 대해 “성공이 어려워 보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을 위한 징계 취소는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 시장이 불쾌감을 드러내 어색한 상황을 연출했다. 그런데 2호 혁신안마저 별다른 호응이 없다면 혁신 동력도 좌초될 수도 있어서다. 지도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요구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어 ‘릴레이 불출마 선언’은 곧바로 연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syj@

## 정의당, 이정미 대표 포함 지도부 총사퇴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 추진

이정미 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지도부가 6일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정의당은 전날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혁신재창당 관련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오늘로 저를 비롯한 정의당 7기 대표단은 물러난다”며 “더 단단해질 정의당, 더 넓어질 정의당을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한 ‘신당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더 과감히 전국위 결의를 수행하도록 길을 트는 당의 체제 전환과 개편”이라며 “저와 7기 대표단 모두는 당의 일원

으로 이번 전국위 결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 있더라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기후위기 불평등 해소,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하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녹색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과 노동세력, 지역 정당 추진 세력을 포함한 제3정치세력을 폭넓게 만나고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전날 혁신재창당을 위해 한국사회 대개혁을 위한 10대 비전과 5가지 약속안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녹색당, 노동계 등 진보세력과 연합정당을 구성해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계획이다. /서예진 기자

## 韓·美·日,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고위급회의 분기별 정례화

한국, 미국, 일본이 3국 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고위급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인성환 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앤 뉴버거 미국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 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장관 등 3국이 만나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전했다.

한미일 3국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는

핵·WMD(대량살상무기) 등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합동으로 마련하는 것을 포함해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3국 간 실질적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한편 인성환 2차장은 지난달 30일 호주 대런 골드 국가 사이버 안보조정관과 면담을 하고 양국이 공동의 위협을 식별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호 양국 간 실무그룹을 신속히 구성해 협력 범위·대상과 실무그룹 구성·일정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